

금융복지 관점에서 본 신용교육의 재개념화 : 확장형 신용교육의 이론적 틀

이주형*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개인적 차원, 즉 신용점수 관리나 연체 예방 등 단편적인 금융행동 관리에 치중되었던 신용교육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금융복지(Financial Welfare)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신용교육, 금융복지, 그리고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신용교육은 개인의 금융역량 강화에는 기여하였으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책임 있는 거래, 기업 및 경제주체 간의 계약 이행을 통한 사회적 신뢰 형성, 그리고 금융사고로부터의 회복 및 재기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신용교육의 범위를 개인 신용관리를 넘어 회복 및 재기, 신용경영, 그리고 사회적 신뢰 형성까지 확장하는 확장형 신용교육(신용교육 3.0)의 개념적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은 경제 공동체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향후 금융복지 기반의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학술적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신용교육, 금융복지, 사회적 신뢰, 신용경영, 금융윤리

*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산학협력중점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자산관리론)
(inforhunter@hanmail.net)

I. 서론

신용은 개인의 금융점수나 채무관리를 뜻하는 금융적 권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 간 약속 이행과 거래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신뢰 자본으로서 경제 공동체 질서의 핵심 기반이다. 이병기(2010)는 사회적 신뢰가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으며, Putnam(1993) 역시 신뢰를 공동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신용 역량이 개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 사회적 신뢰 자본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신용이 사회 전반의 경제 질서와 신뢰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재인식되고 있다. 한국은행(2019)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거래 안정성의 기반이 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업 간 신뢰와 계약 이행의 교육적 의미는 사회적 신뢰 및 계약문화 관련 선행연구와 결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2022)은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이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역량과 책임 있는 금융행동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온라인 평판과 데이터 기반 신뢰가 새로운 신용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개인 중심 신용교육이 다변화된 금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한편, 국내 신용교육은 개인의 신용관리, 연체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합리적 금융생활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국가 주도하에 발전해 왔다. 신용교육은 청소년과 청년의 기초 금융역량 형성, 금융취약계층의 위험 예방,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재기 기반 마련에 상당한 성과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신용 문제는 개인의 생활 관리 차원을 넘어 개인과 기업의 거래 신뢰,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책임, 다양한 경제주체의 계약 문화, 사회적 금융윤리, 공동체 신뢰 질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신용교육은 여전히 개인의 관리 역량에 집중되어 있으며, 채무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자체 실적 기준에 따르면 2024년 채무조정 신청자는 19.5만 명으로¹⁾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매

년 수만 명 규모의 채무조정 신청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신용을 개인의 금융행동 차원에서 주로 접근해 왔으며, 회복·재기, 거래 신뢰, 디지털 책임,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특히 금융복지²⁾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신용교육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융과 복지라는 융합 구조는 개인과 가계가 과도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교육적 기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신용교육은 개인의 금융기술 교육을 넘어 예방·회복·재기·사회적 신뢰 형성을 포괄하는 시민적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³⁾ 개념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SG의 사회(S) 영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⁴⁾, 금융교육(financial literacy) 등이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교육을 개인 차원을 넘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ESG 경영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도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신용교육은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가? 둘째, 금융복지 관점에서 확장된 신용교육은 어떠한 개념과 핵심 영역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개인 신용관리 중심의 교육 범위를 확장하는 '확장형 신용교육'을 개념화하고, 향후 정책 및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단계적 확장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용교육 3.0'이

1) 신용회복위원회, 「2024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이 수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금융복지(financial welfare)는 학술적 표준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주로 신용회복지원(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자활 지원 등 민간 실무 현장에서 통용되어 온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 금융상담, 신용회복지원, 서민금융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지원체제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S) 영역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포용 논의가 신용교육의 확장과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4)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World Bank, 2022). 이는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의 대응 개념으로, 금융복지의 제도적 기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라는 보조용어를 병행 사용하되, 이는 학술적 개념 정의를 대체하는 용어가 아님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신용교육의 정의와 범위

신용교육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금융 생활에서 요구되는 신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 행동을 실천하도록 돕는 금융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김영희·김경모(2011)의 경제교육 과정 분석에서 신용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신용에 관한 지식·이해·태도·행동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교육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제 연구에서도 금융교육은 개인의 금융 행동과 금융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usardi와 Mitchell(2014)은 금융이해력이 높은 개인일수록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고 과도한 부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OECD(2021) 역시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신용교육은 신용점수 관리, 연체 예방, 과중 채무 방지, 합리적 소비와 저축 등 개인의 신용관리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국내에서 수행된 신용교육이 주로 강조해 온 영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희·김경모(2011)는 중학교 사회과 경제 교육과정의 신용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금융 일반과 금융제도 이해가 중심이었으나, 2007 개정 이후에는 신용관리와 개인 재무관리의 비중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국내 신용교육이 제도·정책 중심의 금융 이해에서 점차 개인의 신용관리와 재무 관리 중심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신용교육은 신용점수 관리나 연체 예방 교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용은 약속의 이행, 책임 있는 거래행동, 금융질서 준수, 사회적 평판, 공동체 내 신뢰 형성과도 연결되므로, 신용교육은 이러한 관계적·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채무 발생 이후의 회복과 재기, 기업과 조

직의 거래 신뢰,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 있는 경제행동 등은 현대적 신용교육에서 새롭게 중요해지는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신용교육을 개인 또는 경제주체가 신용의 형성, 유지, 훼손, 회복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금융·경제행동을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신용교육의 범위를 협의의 개인 신용관리 교육에서 광의의 회복지원, 신용경영, 사회적 신뢰 형성 교육으로 확장하여 파악한다. 이는 기존 신용교육의 성과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신용교육의 개념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표 1〉 신용교육의 개념 범위

구분	범위	주요 내용
협의의 신용교육	개인 신용관리 중심	신용이해, 점수관리, 연체예방, 채무관리, 합리적 소비
확장된 신용교육	회복·재기 및 사회적 신뢰 포함	회복지원, 재기교육, 거래 신뢰, 신용경영, 금융윤리, 공동체 신뢰

신용은 개인의 금융상태 지표인 동시에, 약속 이행과 사회적 평판을 매개하는 관계적 자원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신용은 교육을 통해 형성·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확장형 신용교육은 유관 교육 개념과 그 차별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교육(financial literacy)은 개인의 금융지식과 합리적 의사결정 역량 형성에 초점을 두는 포괄적 개념으로, 신용교육은 그 하위 영역에 해당한다(김영희·김경모, 2011). 그러나 확장형 신용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신용의 형성·유지·회복이라는 과정과 수반되는 관계적 책임을 교육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금융교육과 구별된다. 또한 금융복지교육 및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논의는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자립 지원에 주된 관심을 두는데, 본 연구는 이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재기 영역의 이론적 기반으로 수용하여 신용교육의 범위 안에 통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다음으로 경영학 분야의 기업 신용교육은 신용평가 대응이나 자금조달 역량 제고

등 기업의 재무적 목적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의 신용경영 영역은 신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관계적 자본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그 지향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금융윤리교육과 시민경제교육은 규범적 가치와 시민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사회적 신뢰 교육 영역과 맞닿아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윤리적·시민적 차원을 '신용'이라는 구체적 매개 자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개인 신용관리에서 공동체 신뢰 형성에 이르는 연속적 교육체계 안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확장형 신용교육은 본질적으로 논의되어 온 인접 개념들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매개로 이들을 하나의 교육적 틀 안에서 재통합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2. 금융복지와 신용교육의 관계

금융복지는 경제주체인 가계와 개인이 금융생활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교육적 기반을 의미한다. 임유진·남희은(2022)은 이러한 금융복지가 재무컨설팅, 금융교육, 채무조정 연계 등 확장된 서비스 형태로 구현되며, 특히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실천 영역에서 구체화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인정(2022)은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융이해력, 금융 경험, 금융교육 태도가 금융사회복지실천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금융복지가 사후적 지원이나 정보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 주체의 교육적 역량 형성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영역임을 시사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교육적 기반이란 금융복지 관점에서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니라 예방, 회복, 재기 및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신용교육 역시 개인의 금융활동 기술인 신용관리 지식의 습득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채무위험 예방과 더불어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재기, 자립 생활 안정, 책임 있는 경제행동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 금융복지 관점은 신용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점수 향상에서 장기적 삶의 안정과 공동체 내 신뢰 회복으로 확장하며, 이는 신용교육을 개인 관리 중심에서 사회적 신뢰 형성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금융복지와 신용교육의 관계는 점차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임유진과 남희은(2022)은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사후적 지원에 그치지 않는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경험을 통해 금융역량의 회복과 심리·정서적 자립 의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서민금융진흥원(2021)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신용관리 교육이 채무위험 예방과 금융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신용교육이 금융복지 정책과 결합될 때 예방과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문헌검색 절차와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는 신용교육의 확장 방향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문헌검색 절차를 수행하였다. 문헌검색은 200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발행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RISS, DBpia, KCI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핵심 검색어로는 “신용교육”, “금융복지”, “신용회복”, “금융윤리”, “사회적 신뢰”를 설정하였고, “채무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거래 신뢰” 등을 보조 검색어로 활용하였다.

문헌 수집은 식별(identification), 선별(screening), 적격성 평가(eligibility), 포함(inclusion)의 4단계로 진행하였다. 식별 단계에서 핵심 검색어로 검색된 문헌은 RISS 630건, DBpia 715건, KCI 2,414건으로, 총 3,759건이 확인되었다. 선별 단계에서는 문헌의 제목이 연구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1차 선별을 수행하였다. 이때 신용교육 관련 문헌의 수록 범위가 가장 넓은 RISS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선별을 진행하고, DBpia·KCI의 문헌정보를 상호 대조하여 중복 여부와 누락을 보완하였다. 적격성 평가 단계에서는 선별된 문헌의 초록과 원문을 검토하여 분석 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외 기준을 함께 적용하였다. 제외 기준은 ① 중복 문헌, ② 금융상품 판매 및 투자성과 중심 자료, ③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문헌으로 설정하였다. 포함 단계에서는 위 기준을 통과한 문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 89편이 포함되었다.

선별된 89편의 문헌 전체에 대한 전수 심층 분석 대신, 초록 중심의 주제 범위 문

헌고찰(Scoping Review)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 목적, 대상, 방법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문헌은 데이터 추출 양식에 따라 ‘추출 사이트’, ‘키워드’, ‘문헌구분’, ‘문헌제목’, ‘초록’ 항목으로 구조화하였다. 단, 본 연구가 개별 문헌의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이 아니라 개념 도출을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인 점과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89편 전체 서지 목록을 일괄 제시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별 구성과 범주별 대표 문헌을 별도의 부록(Appendix)으로 정리하였다.

선정된 문헌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 세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신용교육의 개념, 대상, 교육내용 및 효과를 다룬 연구, 둘째, 금융복지 및 신용회복과 관련된 회복·자립 지원 연구, 셋째, 금융윤리 및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수집된 문헌들의 개별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록에 집약된 핵심 주제와 연구 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문헌의 범주별 분류 결과

분석 범주	핵심 검색어	국내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소계
신용교육 중심 연구	신용교육	21	9	15	2	47
금융복지 및 회복지원 연구	금융복지, 신용회복, 채무관리	7	4	9	2	22
금융윤리 및 사회적 신뢰 연구	금융윤리, 사회적 신뢰	2	0	15	3	20
합계		30	13	39	7	89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분석 대상 문헌의 과반(47편, 52.8%)이 신용교육 중심 연구에 해당하며, 금융복지 및 회복지원 연구가 22편(24.7%), 금융윤리 및 사회적 신뢰 연구가 20편(22.5%)을 차지하였다. 문헌 유형별로는 연구보고서(39편, 43.8%)가 가장 많았으며, 국내학술논문(30편, 33.7%), 학위논문(13편, 14.6%), 단행본(7편, 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신용교육 연구가 학술논문보다 정책기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윤리 및 사회적 신뢰 연구 범주에서 학위논문이 0편인 점은 해당 영역이 아직 본격적인 학술 연구 대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헌 분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째, 각 문헌이 신용 또는 신용교육을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둘째, 교육의 주요 대상과 내용 범위는 무엇인가? 셋째, 기존 신용교육의 성과와 한계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넷째, 금융복지, 회복지원, 사회적 신뢰, 디지털 책임, 신용경영 등과의 연계 가능성은 어떠한가? 다섯째, 향후 신용교육의 확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교육적 시사점이 도출되는가?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문헌 간 공통 요소와 차이를 비교·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확장형 신용교육의 개념과 핵심 구성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문헌검색은 체계적 문헌고찰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개념화 연구를 위한 문헌 기반 탐색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보다, 기존 논의를 종합하고 누락되어 온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신용교육의 확장 방향을 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표 3〉 문헌검색 절차와 분석 기준

구분	내용
검색 데이터베이스	RISS, DBpia, KCI
핵심 검색어	신용교육, 금융복지, 신용회복, 금융윤리, 사회적 신뢰
자료 범위	국내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외, 공공기관 보고서, 공개 정책자료
포함 기준	신용교육의 개념, 대상, 내용, 한계를 다루거나 금융복지, 회복지원, 금융윤리, 사회적 신뢰와의 연계를 시사하는 문헌
제외 기준	중복 문헌, 단순 홍보자료, 금융상품 판매·투자성과 중심 자료,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자료
분석 범주	신용교육 중심 연구 / 금융복지·회복지원 연구 / 금융윤리·사회적 신뢰 연구
분석 목적	기존 신용교육의 범위와 한계를 확인하고 확장형 신용교육의 개념과 구성영역 도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신용교육 직접 문헌뿐 아니라 금융복지, 회복지원, 금융윤리,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인접 문헌까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기존

신용교육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4. 관련 선행연구 검토

기존 신용교육 관련 연구는 대체로 개인의 신용관리 역량 강화와 금융생활 안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특히 대학생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신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경제교육 및 금융교육 과정에서의 신용 관련 내용 분석, 신용교육 필요성 인식 조사, 교육 효과 분석 등이 주요 연구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금융이해력 제고와 합리적 소비 습관 형성, 과중채무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연구의 상당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검증에 집중되어 있어, 신용을 사회적 관계나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확장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금융복지 및 신용회복 관련 연구는 금융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 채무조정 이후의 회복과 재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채무조정 제도,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의 역할을 보다 넓은 사회적 지원체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신용문제를 개인의 관리 문제를 넘어 구조적 위험과 사회적 지원의 문제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사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용교육과의 체계적 연계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금융윤리 및 사회적 신뢰 관련 연구는 금융행위를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규범의 문제로 이해하고, 신뢰, 계약문화, 책임 있는 경제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용을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관계적 자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역시 신용교육과 통합된 교육체계로 발전된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신용교육, 금융복지, 사회적 신뢰를 각각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간의 통합적 접근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용교육은 개인의 금융행동 개선에, 금융복지는 사후적 지원에, 금융윤리 및 사회적 신뢰 연구는 관계적·제도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호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는 신용교육을 금융복지 및 사회적 신뢰 형성과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출

발점이 된다.

5. 연구 설계 및 분석 틀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분석을 기반으로 신용교육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개념적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기존 신용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고, 금융복지 및 사회적 신뢰 관점에서 확장된 교육체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검색 절차를 통해 신용교육, 금융복지, 신용회복, 금융윤리 및 사회적 신뢰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신용교육, 금융복지 및 회복지원, 사회적 신뢰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주요 연구 흐름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교육의 확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확장형 신용교육(신용교육 3.0)’의 개념으로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 연구의 개념과 논의를 통합·재구성하여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의 엄밀한 통계적 절차를 적용한 연구는 아니나, 문헌의 체계적 수집과 범주화를 통해 개념적 통합을 시도한 준-체계적 문헌분석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III. 국내 신용교육의 현황과 한계

1. 공적 통계로 본 신용교육의 필요성

신용교육의 필요성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심화에서 확인된다. 박창균(2012)은 가계부채 증가의 거시·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며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구조적 위험 환경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역량 강화 및 신용교육의 정책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은 1,978.8조 원에 이르며,⁵⁾ 금융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발표한 취약차주 및 연체 관련 자료에서도 상환 부담이 집중된 취약계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신용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금융기술 부족이나 일시적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금융위험과 생활 불안정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임진(2017)은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보다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유지와 채무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 공적 구제제도 등 금융지원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공표 실적에 따르면 2024년도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9.5만명으로 나타났으며,⁶⁾ 서민금융진흥원(2025)이 발간한 ESG경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상담, 교육, 맞춤형 지원 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는 기관 자체 공표 실적이므로, 정책 효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 검증 자료와의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는 신용문제가 사후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이 결합된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신용교육은 채무 발생 이전의 예방교육과 채무 발생 이후의 회복·재기교육을 함께 포함하는 체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환경의 확대 역시 신용교육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최근 연구에서도 디지털 금융환경 확산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이해 능력과 금융행동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2022)은 디지털 금융환경 확대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과 책임 있는 금융행동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위원회(2025)에 따르면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257억 원에 달하며, 방송통신위원회(2025)가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 건수 역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의 피해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용 문제가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서의 상환능력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 평판, 정보 신뢰,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책임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대적 신용교육은 연체 예

5) 한국은행. (2025, 2.25). 2024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 보도자료.

6) 신용회복위원회. (2024). 2024년도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방과 점수관리뿐 아니라 디지털 거래질서, 책임 있는 정보행동, 플랫폼 환경에서의 신뢰 형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신용교육을 실제로 수행해 온 공공기관의 교육 실적 역시 제도적 축적을 보여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매년 대규모의 신용 및 금융교육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실적으로 공표하고 있다.⁷⁾ 이는 국내 신용교육이 이미 일정한 공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축적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은 여전히 개인 신용관리, 연체 예방, 금융생활 안정 중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거래 신뢰, 회복 이후의 재기, 금융윤리, 사회적 신뢰 질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표준화된 모형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적 통계와 운영 실적은 신용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개념과 범위를 보다 확장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함께 제기한다.

〈표 4〉 신용교육의 필요성과 제도적 축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

지표 영역	내용	출처	본문 활용 방식
가계부채 규모	2024년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8조 원	한국은행 「가계신용(잠정)」	구조적 배경 제시
취약차주· 연체 현황	취약차주 약 399.1만 명(2023년 말), 가계대출 연체율 0.55%(2024.9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교육 필요성 제시
채무조정 수요	채무조정 신청 19.5만 명(2024년)	신용회복위원회 「2024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회복·재기교육 필요성 제시
금융취약계층 지원 실적	금융상담 약 96만 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 약 57만 건(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2024 ESG경영성과보고서」	금융복지 연계성 제시

7) 각 기관의 최근 공식 발표 실적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2024년 연간 교육 실적은 약 113만 명, 금융감독원의 2023년 연간 교육 실적은 약 66.9만 명, 서민금융진흥원의 2024년 상반기 교육 실적은 약 48.2만 명으로 보고되었다. 각 기관의 교육 대상 및 집계 방식(온/오프라인, 단기 특강 등)이 상이하고 대상자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순 합산은 지양하였으나, 개별 기관의 공표 실적만으로도 국내 공적 신용교육의 양적 규모와 수요가 방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 영역	내용	출처	본문 활용 방식
디지털 금융피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257억 원(2024년), 온라인피해 상담 건수 전년 대비 2배 증가 (2024년)	금융위원회(2025), 방송통신위원회(2025)	디지털 신용질서 교육 필요성 제시
공공 교육 실적	[신복위] 약 113만 명(2024년), [금감위] 약 66.9만 명(2023년), [서금위] 약 48.2만 명(2024.상반기)	각 기관 연차보고서 및 공식 보도자료	제도적 축적과 한계 동시 제시

〈표 4〉는 신용교육의 필요성이 단지 규범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 취약차주, 채무조정 수요, 디지털 금융피해, 공공 교육 실적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지표들은 기존 신용교육이 개인의 예방교육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지원, 디지털 책임, 거래 신뢰, 사회적 신뢰 형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국내 신용교육의 추진 현황

국내 신용교육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주로 학교, 취약계층 관련 기관,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일부 민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수요처에 실시되어 왔다. 즉, 소비자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 제고를 목적으로 청소년, 청년,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초 금융교육과 신용관리 교육을 병행해 실시해 왔고 채무조정제도 및 서민금융 지원기관은 금융취약계층과 채무조정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 신용회복, 재기지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 신용교육의 주요 대상은 대체로 청소년, 청년,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분된다.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교육은 신용의 기초 이해, 합리적 소비, 신용점수 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예방적 성격이 강하며, 금융취약계층과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채무조정 제도 이해, 상환 이행, 생활관리, 재기지원 등 회복 중심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국내 신용교

육은 생애주기와 위험 수준에 따라 대상별로 일정한 차별화를 보여 왔다.

운영 방식은 학교 연계형 교육, 기관 방문형 특강, 집합교육, 상담 연계형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공기관 중심의 무상 지원 신용교육은 단발성 강의가 많지만 금융상담, 채무조정, 재무관리 지원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금융지식 제공을 넘어 실용적 지원의 성격을 일부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용점수 관리, 연체 예방, 채무관리, 금융생활 안정 등 개인의 위험관리와 예방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진수(2021)는 금융교육이 일회성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경우 학습 내용이 단기간에 소멸되며,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에서는 실질적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신용교육이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별 차별화와 교육 효과 측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추진 구조는 국내 신용교육이 공공적 필요에 따라 실용적·예방적 성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여러 기관이 유사한 교육영역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교육의 개념 범위, 대상별 표준모형, 교육 성과평가 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기업의 거래 신뢰,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용질서, 시민적 금융윤리, 사회적 신뢰 형성과 관련된 교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황은 기존 신용교육이 일정한 제도적 축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다 확장된 개념과 체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3. 기존 신용교육의 성과와 한계

국내 신용교육은 개인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선택과 과도한 부채 위험 예방을 위한 금융지식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교육 대상은 주로 청소년, 청년,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신용의 의미, 신용점수 관리, 합리적 소비, 연체 예방, 채무조정 이해 등 개인의 금융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주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신용교육은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 과다 채무 위험 예방, 금융생활 기초역량 제고 측면에서 분명한 의의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신용교육은 복지개념을 도입한 사회안전망의 보조적 기능도 수행하였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신용회복 제도 이해, 채무조정 이후 이행을 위한 생활관리, 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지원 체계의 중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기존 신용교육은 개인의 금융행동 개선과 위기 예방에 기여하였고, 국내 금융질서 유지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신용교육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신용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의 관리 역량 차원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신용은 개인의 생활습관뿐 아니라 고용 불안정, 소득구조, 디지털 거래 환경, 사회적 신뢰 수준 등과도 연결되지만, 기존 교육은 대체로 개인 책임과 예방 교육에 집중하였다. 둘째, 기업과 같은 타 경제 주체에 대한 신용관리 문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거래 신뢰, 계약 준수, 금융 책임, 협력 관계 유지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이나, 기존 신용교육은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를 적극적인 교육 영역으로 설정하지도 않았다. 셋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온라인 거래와 플랫폼 경제에서는 평판, 정보 신뢰, 개인정보 활용, 전자적 책임이 중요한 신용 요소로 작동하지만, 기존 교육은 오프라인 금융거래 중심의 내용을 주로 다루어 왔다. 넷째, 사회적 신뢰와 금융윤리를 매개하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신용은 사회적 약속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나, 기존 교육은 이를 시민적 질서와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신뢰의 맥락으로 확장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한계는 기존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재기, 신용경영, 사회적 신뢰 형성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IV. 확장형 신용교육의 개념화

1. 확장형 신용교육의 개념

확장형 신용교육은 기존 신용교육의 연속선상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한 개념이며, 그 구조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용교육 3.0'이라는 보조용어를 병행한다. 단

계적 확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 5〉 신용교육의 단계적 확장

단계구분	핵심 초점	주요 대상	주요 내용
신용교육 1.0 (기존 신용교육)	개인 신용관리	청소년, 청년, 일반 금융소비자	신용이해, 점수관리, 연체 예방, 금융생활 기초
신용교육 2.0 (신용회복 지원형)	회복 및 재기	금융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채무조정 이해, 생활관리, 재기 역량
신용교육 3.0 (확장형 신용교육)	신용 경영 및 사회적 신뢰 형성	개인, 기업, 시민사회	개인관리, 회복지원, 거래 신뢰, 금융윤리, 공동체 신뢰

주: 단계 구분은 정책 변화와 교육 내용의 전환을 기준으로 한 개념적 구분이며, 시기 간 경계는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용교육 1.0(개인신용관리), 2.0(회복·재기), 3.0(신용경영·사회적신뢰)은 정책변화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단계적 확장을 나타낸다.

2. 확장형 신용교육의 핵심 구성영역

본 연구에서는 신용교육 3.0의 핵심 영역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개인 신용관리 영역이다. 이는 기존 신용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영역으로서, 신용의 의미 이해, 신용점수 관리, 합리적 소비, 연체 예방, 금융생활 설계 등을 포함한다. 신용교육 3.0은 기존 신용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토대로 보다 넓은 구조로 확장하는 개념이 되어야 하므로 개인 신용관리 영역은 여전히 핵심적 위치를 가진다.

둘째는 회복 및 재기 영역이다. 신용 문제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예방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중채무자 또는 저신용 상태의 취약계층이 위기를 경험한 이후, 이들의 회복과 재기는 중요한

교육 과제가 된다. 이 영역은 채무조정 이후의 생활관리, 재무적 회복, 재기 역량 형성, 반복적 위험 예방 등을 포함한다. 금융복지 관점에서 볼 때 신용교육은 단지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이후 다시 안정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셋째는 신용경영 영역이다. 이는 신용교육 3.0의 가장 중요한 확장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오늘날 기업의 신용은 자금조달 능력이나 외부평가 결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속 이행, 계약 준수, 금융책임, 협력관계의 신뢰 유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 등이 모두 기업 신용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경영 교육은 향후 신용교육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용을 개인의 소비생활 차원을 넘어 경제활동 전반의 책임성과 연결하는 교육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확장은 서론에서 논의한 사회적 자본 관점, 즉 신뢰가 거래를 매개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기업의 신용은 거래처·금융기관·소비자와 반복되는 계약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거래비용이론의 설명과 맞닿는다. 거래 상대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계약 이행을 감시·강제하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약속 이행과 계약 준수에 관한 신용경영 교육은 바로 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협력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신용경영은 개인 신용관리와 동일한 신뢰 형성의 원리를 기업 수준에서 구현하는 신용교육의 정당한 구성영역으로 포섭될 수 있다.

넷째는 사회적 신뢰 교육 영역이다. 신용은 개인의 금융행동을 넘어 공동체 내 약속과 책임, 계약문화, 금융윤리, 신뢰 기반 경제질서와 연결된다. 따라서 신용교육은 시민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 형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 영역은 책임 있는 금융행동, 계약의 중요성, 공동체 질서, 상호 신뢰의 사회적 가치 등을 다룬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평판과 책임, 온라인 거래에서의 신뢰 형성 문제 또한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영역이 신용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는, 신용이 개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 공동체 질서를 지탱하는 관계적 자원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 관점에서 도출된다. 약속 이행과 계약문화, 금융윤리에 관한 교육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 전달이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의 호혜적 규범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신용을 시민적 책임과 공동체 신뢰 형성의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개

인 신용관리·회복·신용경영 영역을 공동체 수준에서 통합하는 신용교육의 최종적 확장 지점으로 자리매김한다.

〈표 6〉 신용교육 3.0의 핵심 구성영역

영역	핵심 내용	교육적 의미
개인 신용관리	신용이해, 점수관리, 연체 예방, 금융생활 설계	기초 금융역량 형성
회복 및 재기	채무조정 이해, 생활관리, 재기 역량, 재발 방지	금융복지와 자립 지원
신용 경영	거래 신뢰, 계약 준수, 금융책임, 협력 신뢰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 신뢰 교육	금융윤리, 계약문화, 공동체 책임, 디지털 신뢰	공동체 신뢰 질서 형성

3. 기존 신용교육과의 차별성

신용교육 3.0은 기존 신용교육과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교육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과 시민사회로 확장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 목표를 점수관리와 연체 예방에서 회복, 재기, 책임 있는 경제행동, 사회적 신뢰 형성으로 넓힌다는 점이다. 셋째, 신용을 금융 지식과 같은 정보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회의 지속 가능한 근본적 자원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은 신용교육을 보다 넓은 금융복지 체계와 연결하고, 신용을 시민사회와 경제질서를 매개하는 교육 의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정책적·교육적 시사점

신용교육 3.0은 기존의 개인 금융관리와 연체 예방 중심에서, 재기지원·신용경영·사회적 신뢰 형성까지 포괄하는 정책 범위 확장을 요청한다. 이는 신용교육이 금융 지식에 대한 정보 전달 사업이 아니라 금융복지와 사회적 신뢰를 함께 다루는 공공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신용교육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개인 중심 교육에서 기업 및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표준 교육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대상(청소년, 취약계층, 기업 등)별로 차별화된 모듈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교육의 효과가 태도를 매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할 때, 교육과정은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태도 형성과 실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박형준·이주호(2025)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교육 설계가 금융행위 변화로 연결되는 핵심 경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기초 금융역량과 책임 있는 금융행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취약계층에게는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가 금융 사기 노출 방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거래 신뢰와 금융책임, 계약 준수 중심의 신용경영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금융윤리와 신용사회 문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과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적 신용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상별 교육체계는 신용교육을 보다 실천적이고 포괄적인 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 신용교육 논의가 금융이해력과 개인행동 개선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신용교육을 금융복지와 사회적 신뢰 형성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였다. 이는 신용교육을 금융교육의 하위 영역으로만 보지 않고, 복지, 시민교육, 경제질서 교육이 만나는 융합적 연구영역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신용경영과 사회적 신뢰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적 틀은 향후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평가, 정책 분석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이론화와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용교육을 개인 금융관리 교육의 하위 영역에서 벗어나 금융복지와 사회적 신뢰 형성을 연결하는 통합적 교육체계로 재정의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정책적으로는 신용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신용교육은 개인의 관리 역량 강화뿐 아니라 회복과 재기, 거래 신뢰, 계약문화, 금융윤리, 공동체 책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가 중요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교육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문헌에 기반한 개념화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실제 교육과정 운영의 타당성이나 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장된 신용교육의 구성영역에 대한 전문가 검토, 대상별 교육과정 설계,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신용교육의 개념을 금융복지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신용교육의 새로운 확장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22). **디지털 금융혁신 보고서**. 서울: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2025).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보도자료.
- 김영희·김경모(2011). 중학교 사회과 경제교육과정의 신용교육 내용 분석. *현대교육연구*, 23, 153-171.
- 박창균(2012).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대응. KDI 국제컨퍼런스 「가계부채의 주요문제와 대응방안」 세션3 발표자료. 세종:한국개발연구원.
- 박형준·이주호(2025). 금융교육 경험이 성인의 금융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금융지식과 금융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금융교육연구*, 10(2), 91-112.
- 방송통신위원회(2025). **2024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운영 현황**.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2025). **2024 ESG 경영성과보고서**. 서울: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2024). **2024년도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 이병기(2010). 사회적 신뢰와 경제성과: 경제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연구*, 28(1), 27-52.
- 이인정(2022).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금융사회복지실천효능감에 대한 금융이해력, 금융경험과 금융교육 태도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4(3), 117-144.
- 임유진·남희은(2022).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복지 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9), 476-483.
- 임진(2017).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금융브리프*, 26(11), 4-10.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은행(2019). 2018년 기업경영분석. 서울: 한국은행.
- _____(2024).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 서울: 한국은행.
- _____(2025.2.25.). 2024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보도자료.
- 한진수(2021). 금융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고찰. *금융교육연구*, 6, 1-26.
- Lusardi, A., & Mitchell, O. S. (2014). The economic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2(1), 5-44.
- OECD (2021).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literacy*. Paris: OECD Publishing.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2021). ESG integration framework. London: PRI. Retrieved from <https://www.unpri.org>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rld Bank (2022). *Financial inclusion overview*.

Washington, DC: World Bank. Retrieved from <https://www.worldbank.org/en/topic/financialinclusion/overview>

Abstract

Reconceptualizing Credit Education from a Financial Welfare Perspectiv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tended Credit Education

Lee, Joo Hyo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credit education, which has centered on individual credit management, and to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extends the concept of credit education from a financial welfare perspective. To this end, the literature on credit education, financial welfare, and social trust was systematically analyzed, and the conceptual relationships among these domains were reconstructed. The analysis reveals that existing credit education is disproportionately focused on individual financial behavior management, failing to adequately encompass recovery and rehabilitation, corporate transactional trust, digital responsibility, and the formation of social trust.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Extended Credit Education (Credit Education 3.0), which integrates four core domains — personal credit management, recovery and rehabilitation, credit management for enterprises, and social trust education — and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designing financial welfare-based education policy.

Key words Credit Education, Financial Welfare, Social Trust, Credit Management for Enterprises, Financial Ethics

투고: 2026. 5. 14.

심사: 2026. 5. 18. – 6. 12.

게재: 2026. 6. 12.

*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fessor at the Bio Campus of Korea Polytechnics Specialized University, and Adjunct Professor in Asset Management at Soongsil Cyber University (inforhunter@hanmail.net).